

시대 못따르는 회계처리, 특허·R&D 등 무형가치 반영을

新의감법 도입

〈下〉갈길 먼 회계개혁

무형자산 처리 명확한 기준 없어
일관성·다양성 반영 기준 논의를
아파트·사립대학 등 비영리 단체
'불투명 자금' 감사공영제 도입할 만

지난 11월 1일부터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회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주관적 회계처리로 인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향후 회계업계는 무형자산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공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시대에 뒤떨어진 '무형자산' 회계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2차 회의가 열 예정이다.

〈무형자산 회계기준의 비밀관성〉

종류	내용	US	IFRS	
외부취득	기업이 제3자로부터 무형자산을 취득	자산화	자산화	
최초취득	내부창출	연구개발비, 고객명단, 광고선전비와 같이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투자	비용화(예외: 소프트웨어)	부분적 자산화
	기업결합	기업의 결합과정에서 인식하는 무형자산	자산화	자산화
후속측정	재평가	무형자산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반영	허용안함	허용
	손상평가	무형자산의 자산성 상실	손실인식, 환입 불가	손실인식, 환입 허용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측과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2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전반에 무형자산 처리에 대한 회계 감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무형자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투자자

는 물론 바이오업계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회계업계는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논의가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최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장부가치는 100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들의 시가총액 기준 기업가치는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가 회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다.

회계업계는 '일관성' 있고 '다양성'을 반영한 무형자산 산정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형 회계기준위원장은 "원칙과 기준이 다른 무형자산 반영은 회계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무형자산의 복잡성, 다양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대안으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 & A) 공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경영자 시각에서 기업 재무제표 해석 정보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정보, 기업 이익과 현금흐름의 질·변동성에 대한 자발적 공시 제도를 의미한다.

◆ 회계 사각지대를 없애자 '감사공영제'

최근 아파트, 기부금 단체, 사립대학·학교법인 등 비영리단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에서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회계업계는 '감사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사공영제는 아파트, 학교, 기부금단체, 종교단체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 부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아파트 재건축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군수 등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감사공영제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감사 대상인 비영리법인이 스스로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은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감사공영제가 비영리법인의 감사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감사공영제 실시는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구당 1만원을 아낄 수 있고, 감사보수는 3500원으로 나타났다"며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잡이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가을단풍 절정 4일 서울 남산 N타워에서 바라본 산자락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연합뉴스

올 외식물가 2.7% 쯤충... 6년만에 최대폭

통계청, 자장면 등 39개품목 측정

최근 소비자물가가 2% 이하의 상승률을 보이며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외식물가는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외식물가 상승 폭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배 수준에 근접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 폭인 2.4%보다 0.3%p 높은 것으로 2011년 1~10월(4.3%)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외식물가는 자장면·김치찌개 등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음식 39개 품목의 물가를 측정했다.

외식물가 상승세는 최근 2%를 밑돌고 있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 폭(2.1%)보다 오히려 더 축소됐다. 전기요금 등 공공물가가 내려간 영향이다.

외식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 음식이 올해 예년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떡볶이는 올해 1~10월 5.1%나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떡볶이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했던 2011년 1~10월(4.7%)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갈비탕(5.9%), 자장면(4.4%), 볶음밥(4.0%) 등도 2011년 당시 물가 상승 폭에 근접하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외식물가에는 음식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나 쌀 등 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가격은 10월까지 1년 전보다 27.5%나 오르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일부 음식값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외식물가지수는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경총 "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결권제한 개정안 현실화 땐 외국계 투기자본 방어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법 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골자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측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현재는 전체 이사들을 먼저 뽑은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형태다.

법무부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의 감사위원을 선출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돼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고 경총측은 우려했다.

경총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출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경총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사외극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경총은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ujinn6326@〉

실직자, 상호금융 대출 상환 유예

금감원,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시행
최대 3년,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

구분	연체발생 전		연체발생 후	
	사전경보체계	원금상환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실행전 상담
대상자	·연체우려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본인, 배우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담보물권 제공자)
지원조건	·조합차제 선정	·채무관란사유 발생 ·증빙일정규모 이하의 대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조합차제신청(담보권 실행 예정차주)
지원내용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SMS 등으로 안내	·잔여기간의 상환스케줄 조정기간연장(최대 3년)	·(기본) 비용→이자 →원금 ·(변경) 비용→원금 →이자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1회 이상 차주와 상담 의무화

*기타 : 차주정보의 주기적 갱신, 전문상담인력 운영 등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채 보유며,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등이다.

연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변제 순서선택권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나가야 했던 것

을 차주에게 유리하도록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을 경매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이 의무화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